

“말로만 규제완화” 與野, 4월엔 경제활력법 통과?

3월 임시국회, 법안 145건 가결
대부분 중소·중견기업 지원 법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여부 등
경제성장 동력 모색법안은 없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후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하던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가 잠시 정회된 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한노위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8일 4월 임시국회에 돌입한 가운데 4차산업혁명과 경제 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할만한 법안은 나오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5일 3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10건의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3월 임시회에서 총 145건의 법안을 가결했지만,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법이거나 국방·교육·의료 분야 개정안이었다.

3월 국회가 끝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산업재산권 담보대출이 가능해

졌고,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연구개발·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받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한국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지

만, 훈장을 못 받은 공로자는 이를 전달 받게 됐다. 교육 분야에선 대학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이른바 ‘상피제법’도 나왔다. 입학사정관이나 그의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이

내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제도는 손 봤지만, 경제 성장 동력을 모색한 법안은 없었다. 특히 대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법안은 전혀 처리되지 않았다. 가장 처리가 시급한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여부를 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여야는 3월 국회 전부터 이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빅데이터 산업 규제를 완화한 ‘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감안해 사업장과 사업주 피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위시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단 입장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제 개선과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외를 더한 ‘소득주도성장 폐지3법’을 1순위 처리 법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야 입장차로 3월 국회 난제는 별다른 성과 없이 4월 국회로 그대로 넘어왔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쟁점 법안을 대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21대 총선 정국으로 접어든 것을 고려하면 난항을 예상된다. 총돌 지점이 산재한 가운데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진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한편 20대 국회 계류안은 7일 기준 1만 3000여건에 이른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트럼프 만나 비핵화 불씨?... 文의 ‘외교위크’

文, 10~11일 미국 방문
북미대화 재개 공조방안 논의키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외교위크’를 준비 중이다. 외교위크는 슈퍼위크(매우 중요한 행사 및 일정이 잡힌 주)에서 비롯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10일부터 11일 양일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대화 재개’를 놓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때 비핵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을 놓고 외교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접했다. 한미정상회담 사전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지난 5일 새벽 4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상간 의제를 논의했다”며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군건한 동맹 관계를 그쪽에서 여러 번 강조했다”고도 했다.

그뿐만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공화당유대인 연합회 연례행사 때 연설을 통해 “우리는 북한과 잘 지내고 있다. 나는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다. (다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는 없다. 올바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최근 자국 CBS 방송 ‘디스 모닝’에 출연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했다.

이어 “(오는 11일 열릴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때) 핵포기를 선언해 북한으로서 바람직한 방침을 밝히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다가올 한미정상회담의 긍정적인 평가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으로 이어졌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국민방한 가

능성’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 방한)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지 않는다”며 “(오는 6월쯤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미국 역시 그렇게 암시 중”이라고 했다. 일본에서는 오는 6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기 국민방한이 성사된다면 G20 정상회의 후 열릴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대북특사다. 정 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때 ‘대북특사 파견 가능성’ 관련 “가능성이라고 보다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 정부가 북미간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있다. 따라서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 때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이 방안이 마련된다면 대북특사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7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당연히 대북특사 가능성도 힘을 받는다. 이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이 진전 성사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달 마지막 주 역시 외교위크로 분주할 예정이다.

/우승준 기자 dn1114@



휘발유·경유값 7주연속 오름세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7일 오전 서울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해수부, 귀어귀촌 온라인교육 실시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이달 8일부터 ‘귀어귀촌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실시한다.

7일 해수부에 따르면 귀어귀촌 교육은 귀어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에 대해 교육하는 이론 과정으로, 현재 5일 과정의 종합교육(연6회)과 1일 과정의 주말교육(연8회)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지역이 서울과 지방대도시(부산, 대구, 광주)에 국한돼 있고, 교육횟수도 제한적이어서 많은 귀어귀촌 희망자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는 귀어귀촌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어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sealife.go.kr)을 통해 무료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교육은 총 5과목(12강)으로 구성되며 수료 시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 발급하는 11시간의 교육 이수증을 받게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항소심서도 궁지 몰리는 MB

김백준 전 총무비서 10일 증인신문
불리한 증인 증언에 ‘유죄’ 가능성

징역 20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궁지에 몰리고 있다. 기대했던 증인이 잇따라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내놓으면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김백준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이 전 대통령 측은 회복하기 힘든 결정타를 맞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주 속행공판을 열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이들은 1심 법정에서 이어 2심 법정에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MB의 요구에 따라 미국에서 진행 중인 BBK 재판의 비용을 냈다”고 말했고, 이팔성 전 회장 역시 “원하는 고위직에 가기 위해 돈

을 줬다”라고 증언했다. 특히 이 전 우리금융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전화해 ‘한국거래소 자리는 어떡냐’고 물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1심 공판과정에서 ‘MB에게 돈을 줬다’라고 증언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과정에서 이들의 증언을 정면으로 부인하면서도 ‘한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인데 법정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다’며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다. /장용진 기자 ohngbear@

농식품부, 가공식품 ‘수출닥터’ 운영

정부가 최근 세계에서 우리 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가공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정책관을 중심으로 가공식품 주요 품목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수출닥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가공식품 수출은 신선농산물에 비해 저장·운송이 용이하고 검역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아 신규 시장에서 한국 식품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매운맛 라면, 알로에 음료 등은 세계 전역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 식품(K-Food) 인지도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가공식품은 지난해 국가 전체 농식품 수출에서 81.6%를 차지하는 등 수출 기여도가 큰 품목이다.

이번 수출닥터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담당자들로 구성하고 주요 가공식품 업체들을 방문해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